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 전주시 4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 개최 -
-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과 관련해 9월 12일(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 \* ①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중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23.5) 하였으며,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각 지자체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민관협력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복지정보기획과		과 장	정태길 (044-202-3160)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 □ 추진 경과

-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기반 발굴시스템 구축('15.12~)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입수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율\*\* 지속 증가
    - \* (지원대상) ('15년) 1.8만명 → ('17년) 7.6만명 → ('19년) 22.8만명 → ('21년) 66.3만명 → ('22년) 60.6만명
    - \*\* (지원율) ('15년) 16% → ('17년) 25.7% → ('19년) 36.0% → ('21년) 49.5% → ('22년) 50.2%

## □ 발굴 시스템 개요

- (절차) 매 2개월마다 단전·단수 등 약 18개 기관의 39종 위기정보를 입수·빅데이터 분석
  - 약 700만명의 정보수집 대상자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5만명을 선별, 지자체에 통보(연 6회)
    - \* 지자체 자체발굴 포함 한 회차 당 약 20만명 규모 조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방문, 전화 등)한 뒤,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발굴·지원 결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년~'22.12월) 526.7만명을 조사하여 221.5만명(42.1%)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 향후 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근거를 既마련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를 확대\*(39종→44종) 연계
  - \* 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 통·이장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반의 발굴 체계 강화 추진

## 참고2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sup>1)</sup>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sup>2)</sup>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sup>3)</su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로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			

\* ('22, 34종→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하,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③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④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⑤ 가스요금 체납 정보